

# 무너지는 교권... 지난해 교사 134명 정신과 치료

### 광주교육청 5년간 946건 접수... 폭언·수업방해·성희롱順 잠든 학생 깨우다 폭언·폭행 당해... 휴직·퇴직 앞당기기도

교권(敎權)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학생, 학부모가 폭언·성희롱·수업방해·월권행위 등 교권 침해를 일삼으면서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다 욕설과 함께 날아든 주먹에 마음의 병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 후유증으로 휴직한 교사,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5일 광주일보가 확인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광주시교육청 산하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946건이었다.

지난 2013년 252건, 2014년 241건, 2015년 135건, 2016년 87건에 지난해 23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까지 100~200건을 웃돌던 교권 침해사례는 2016년 접

수 주춤했다가 같은해 8월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대폭 증가했다. 이를 계기로 교권 침해 신고와 상담이 늘었다는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이뤄져 과거에는 참고 넘겼던 사안을 적극 신고하고 상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5년간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를 사례별로 보면 ▲폭행 12건 ▲욕설 등 폭언 523건 ▲성희롱 13건 ▲수업방해 244건 ▲기타 154건이다. 기타로 분류된 사례는 정도가 지나친 학생·학부모의 월권행위다.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자녀의 반(또는 모둠, 조)을 바꿔달라고 떼쓰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다. 수업 중 휴

대전화를 수거하는 데 격렬하게 항의하는 학생도 여기에 포함됐다.

교사들은 교권침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 전문상담기관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해에만 134명에 이른다. 교사들은 개별적으로 교육청이 정한 전문상담위원을 찾아가 상담받거나(72명·346건), 6~10명씩 집단으로 찾아가 상담을 받거나(24명·14회),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정신과에서 치료(38명·95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 침해가 잇따르면서 교단의 교민도 깊어지고 있다. 교사 폭행 등 사안이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이후 사태는 원만히 수습됐더라도 한 번 실추된 교권을 다시 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예방책 마련이 중요하지만 이 또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교단의 현실이다. 가해 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배치하려 해도 학생,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강제전학 역시 현행법 아래서 불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 인권 보호에 치중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다 보니, 교권침해가 사실상 일상화되는 분위기가 피해 겪고 도저히 교단에 설 수가 나지 않자며 휴직하거나 퇴직을 앞당기는 교사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업 중 잠든 학생을 깨워야 하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험한 꼴 당할까봐 교사들이 호통 한 번 제대로 못치고 속앓이 하면서 면학 분위기가 자체가 조성되지 않아 다수의 학생에게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0·11일 이틀간 교권업무담당교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 전략을 교육한다. 올해부터 필요할 경우 교권침해 가해자인 학생과 학부모 측을 상대로한 민·형사상 소송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형호기자 khh@



4일 옛 전남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1988년 당시 5·18 왜곡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민단체 “5·18 왜곡 서주석 국방차관 사퇴하라”

### 5개 단체 옛 도청서 기자회견...511 연구회 활동 행정 공개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회는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를 겨냥해 5·18 증거를 조작하고 날조한 조직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등 5개 단체는 4일 옛 전남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을 왜곡한 서 차관은 5월

영령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가 참여해 서 차관의 당시 행적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국방부 5·18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실무위원으로 참여, 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서 차관을 직접 조사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방부가 서 차관을 감싸기 위해 특조위 최종 보고서에 담긴 5·

18 왜곡조직 활동에 관한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며 “511연구위원회 실무위원 명단을 확보해본다 당시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이었던 서 차관의 이름이 보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서 차관은 특조위 진술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서 차관이 몸담았던 한국국방연구원이 1988년 5월 작성한 정문화 대응 지침 보고서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안)’은 광주시민들의 과격 시위에 맞

서 계엄군이 불가피하게 과격 진압을 했다 는 양시론(兩是論)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차관은 이 문서의 작성에는 관여했다고 5월 단체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논리는 현재까지 광주항쟁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있는 지만원씨 등이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특조위 조사결과와 현재 서 차관이 해명하고 있는 내용은 상당 부분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차관은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5개 단체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주석 차관의 사퇴를 위해 지속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4 달뜨기 23:34  
해질 18:57 달지기 09:20



◇지역별 날씨 (°C)

광주	흐리고 비	11/15	보성	흐리고 비	8/12
목포	흐리고 비	10/15	순천	흐리고 비	10/12
여수	흐리고 비	9/12	영광	흐리고 비	10/16
나주	흐리고 비	9/15	진도	흐리고 비	11/14
완도	흐리고 비	10/14	전주	비	10/15
구례	흐리고 비	8/13	군산	비	10/14
강진	흐리고 비	9/13	남원	비	8/14
해남	흐리고 비	10/14	홍산도	흐리고 비	9/14
장성	흐리고 비	9/1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남동~남	0.5~1.5	남~남서	0.5~1.0
남부	남바다	남동~남	1.0~2.5	서~북서	1.0~2.0
남해	남바다(동)	동~남동	0.5~1.5	남동~남	0.5~1.0
서부	남바다(서)	동~남동	1.0~2.0	남동~남	1.5~2.5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좋음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22	05:17
	22:26	17:14
여수	05:48	11:47
	17:43	--:--

◇주간 날씨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	☀	☀	☀	☀	☀	☀
8/13	4/11	2/14	7/17	8/20	9/18	7/18

## 내일까지 비... 당분간 쌀쌀한 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5일과 6일 봄비가 내린 뒤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광주·전남지역은 남서쪽에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11도, 낮 최고기온은 11도~16도로, 비가 내리면 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도 비가 오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찬 공기가 유입돼 바람이 크게 부는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도~12도, 낮 최고기온은 10도~15도로 평년에 비해 3~5도 가량 낮아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까지 광주·전남 예상 강수량은 10~40mm이며, 전남 해안가 지역은 20~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이달부터 소방차 방해 차량 강제 처분

### 다음달까지 시범운영...7월부터 전국 확대

이달부터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이 가능해진다.

4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시청에서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원회는 소방청에서 4월부터 시작하는 ‘소방활동 장애요인 강제처분 시범 실시’를 위해 운영된다.

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 보상여부와 보상액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소방청은 최근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인근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돼 피해가 커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활동 장애요인 강제처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 대상은 광주 등 9개 시·도로, 5월 까지 2개월간 시행한 후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 재난현장 활동 중 현장활동시 발생하는 소방활동 장애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

고흥군

고흥관광 2천만시대

고흥이 먼저다!  
고흥은 우주다!